

# ‘들불야학’ 광천시민아파트 보존될까

### 5·18민주화운동 거점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 시민단체 “오월 정신 태동지 반드시 지켜져야”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들불야학과 5·18민주화운동의 거점이었던 광천시민아파트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지역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최근 서대석 서구청장이 최근 민주화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인 시민아파트의 보존가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지역 시민단체도 밝혔고 나서면서 보존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광천동 주택재개발 계획에 따라 들불야학이 이뤄졌던 광천시민아파트가 조만간 철거

될 상황이다.

들불야학은 광주지역 최초의 노동야학으로 1970년대 말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주민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고, 5·18민주화운동의 출발지였다. 들불야학은 도청에서 최후의 항전을 지휘한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가 주축이 돼 1978년부터 1981년까지 3년 동안 광주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시키기도 했다.

게다가 이 곳에서 5·18민주화운동의 각종 선언문과 9호까지 제작된 ‘투사화보’가 발간되는 등 역사적 장소인

광천시민아파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소식이 지역 시민단체들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들불야학기념사업회 관계자는 “광천동성당만이 들불야학의 유일한 사적지로 등록됐으며, 광천시민아파트의 경우 5·18사적지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실제로 수많은 열사들이 거주하며 가르쳤던 공간인 시민아파트가 보존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수도 자평하고 있지만 광주의 문화는 오월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며 오월정신의 시작은 들불야학이다”며 “그런 공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가 최소한이나마 지킬 수 있도록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구청도 광주

시와 함께 5·18사적지 지정과 시민아파트 보존방법을 논의 중이다.

서구 관계자는 “시민아파트 보존 근거와 방안을 시와 강구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중제 행정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청장과 광주시에서 발벗고 나선 만큼 조만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5·18사적지로 일단 지정돼야 보존근거가 마련되고, 시민아파트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아파트 그 자체를 보존하는 방법과 인근 공원에 들불야학을 기리는 공간을 따로 조성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찬 기자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자치구 과태료 시점 제각각

### 안전신문고 접수 첫날 광주 108건 달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첫날 광주에서는 108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자치구들의 과태료 부과적용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광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주민신고제 확대 도입이 시작된 지난 17일 안전신문고를 통한 광주지역 주민신고는 하루 만에 총 108건이 접수됐다. 구별로 살펴보면 동구 7건, 서구 26건, 남구 7건, 북구 42건, 광산구 26건이다.

각 구청 담당자들은 접수된 사진을 대조하며 불법 주정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청구시점에 대한 기준이 구청마다 달라 민원인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우선 동구는 소화전 등에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단속에 대해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24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산구 또한 비슷한 이유로 5월 8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구와 남구는 적발된 내용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단속기간에 유예를 주는 것은 안된다. 17일 접수된 것도 모두 부과대상이다”며 “신고 접수된 내용을 10일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남구의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12일부터 단속에 대해 충분히 홍보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날 접수된 신고의 경우 단속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7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기로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신고내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지난 17일부터 전국에 확대 도입했다.

한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이나라 기자

## 박홍률 전 목포 시장

###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선거일 6개월 이전에 이뤄지고, 선거에 낙선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4회에 걸쳐 목포지역 고교 동문회 모임 등에 참석해 대양산단 분양과 해상케이블카 건설 등의 시정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장애인의 날’ 기념공연

18일 오후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가한 시민들이 가수들의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김태규 기자

# 대학서 ‘경험적 성폭력 정의’ 과제 논란

### 강사 “본의 다르게 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 사과

광주의 한 대학 시간강사가 ‘학생들의 경험을 토대로 성폭력을 정의’ 하는 내용의 과제물을 학생들에게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주 모 대학에 따르면 A강사는 최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폭력에 대해 정의하시오’라는 제목의 온라인 과제물을 공지했다.

A씨는 “대학생활하면서 성폭행이나 성희롱 등 여러 유형의 성폭력을 겪어 봤을 것이다”며 “이 가운데 자신이 겪은 성희롱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정의를 내려보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의 경험을 서술해주시면 되고, 문제점과 예방책까지 결들이면 더 좋겠

다”고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이 자료는 앞으로 학내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비밀보장이라는 문구도 넣었다. 이 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뒤 일부 학생들이 ‘2차 가해’라며 항의하면서 삭제됐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학과나 대학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과제였다고 판단 A씨에게 수업을 맡기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 검찰, ‘인사 비리’ 보성군 압수수색

검찰이 인사 비리사건과 관련해 보성군청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보성군에 수사관을 보내 총무과 등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전임 군수시절 인사 비리와 관련한 고소사건 증거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용부 전 군수는 재임 시절 특검법원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동부취재본부=김근종 기자

## 음식 절도 잡고보니 성폭행범



○...성폭행 사건으로 수배를 받아 5개월간 원룸촌 일대를 배회하며 오토바이 배달음식을 훔쳐 왔던 40대가 결국 절창행신세.

○...1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46)는 지난 4일 서구 한 원룸촌에서 햄버거와 음료수를 훔쳐달라는 등 최근 수개월 동안 원룸촌에서 숨어지내며 배달음식을 훔쳐먹

고지낸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처음엔 노숙인이 배가 고파 음식을 훔친 것으로 알았는데 신원조회 결과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인천에서 광주로 도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동안 경찰 추적을 피해 은신해 있다가 배달음식 오토바이가 오면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훔친 것 같다. A씨는 인천 부평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종찬 기자

# 회사 사정상 "급매" - 50%가격, 4월 30일까지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3000만원~~ 급매 - 6500만원
- 문의. 010-6834-7400